

선관위 경선관리 축소…민주 ‘초비상’

탄핵 인용판 60일내 선거
대선후보 등록 24일전까지
결선투표제 위탁 어려워
당 위임시 투표 관리 난제

어느 당보다 빨리 대선 준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모든 과정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 어려워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단, 일정을 축소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처지가 됐다. 특히 일부 주자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는 ‘결선투표제’를 선관위에 위탁하기 힘들어져, 결선투표 실시 여부부터 관리 방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언론에 경선 전체 관리의 위탁이 어렵다는 사실을 언론에 알린 뒤 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대선 후보 등록일 24일 전까지만 경선을 관리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경선룰 조율을 담당하는 당 헌당규위원회 관계자는 19일 “후보 등록이 선거 20일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D-44일’이 지난 후로는 선관위가 경선을 관리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후가 대선이다. 선관위는 16일 동안만 경선을 관리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6일 동안 최대한 경선을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일정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당헌당규위 양승조 위원장 역시 “본경선까지는 몰라도 결선투표까지 선관위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신년하례법회에 간 민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전 대표(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결선투표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해 당내에서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나 대선주자들이 결선투표제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주자들은 만일 결선투표제 도입이 무산될 경우 엄청난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을 불씨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사실상 ‘백지위임’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도입을 거부하지 않고 있지만 결선투표 관리의 현실성이 문제점으로 떠오를 경우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선투표 관리는 당에서 맡을 경우 비문

(비문재인) 진영 주자들을 중심으로 당의 결선투표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경선이 더욱 이전 투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의원의 경우 ‘촛불 공동경선’을 주장하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선투표제 문제까지 겹치다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주자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사실상의 ‘백지위임’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박시장 측 박홍근 의원 역시 “지금은 세세한

룰 문제로 고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본선에서 이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측 관계자는 “선관위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수에 경선룰 논의 속도가 늦어지면 지도부가 공언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우선 경선룰 최종안을 만들어 최고위에 올리고 이어 당무위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이런 과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경선룰이 완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潘 빼고?...밑그림 달라지는 ‘3지대 정계개편론’

정치권, 潘 메시지 없고 보여주기식 행보 실망 ‘관망세’

김종인·손학규·국민의당 거리 두기…정운찬 출마 선언

제3지대에서의 정치권 새 판짜기 논의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계개편론의 원동력이었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바람이 예상외로 미풍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의 정치적 행보도 민심의 기대와는 반하는 모습이라서 그와의 연대를 구상했던 정치 그룹들은 러브콜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박’(친 박근혜)과 ‘친문’(친 문재인) 등 양 극단을 배제하고 반 전 총장을 매개로 새로운 정치공간을 창출한다는 개념의 제3지대 정계개편론은 이제 밑그

림이 달라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제3지대 플랫폼을 자처하는 국민의당, 그리고 개헌을 고리로 정계개편론을 모색해온 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은 반 전 사무총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반 전 총장이 이념적 정체성을 범여권에 두고 있고 결국 중도보다는 보수 쪽으로 최종 행선지를 정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는 연일 반 전 사무총장에게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19일 PBC라디오에 출연, “반 전 총장은 준비 안 된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와 함께하기에는 정체성에서 완전히 거리가 멀다”고 밝히, 사실상 기대를 접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는 전날 반 전 총장에 대해 “별로 매력을 못 주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고, 손 전 대표 역시 “수구세력에 얹혀 뭘 하려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에서 기존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

화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오는 22일 정치권 새 판짜기에 시동을 거는 국민주권개혁회의 출범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나란히 참석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이 ‘김종인·손학규·정운찬’이라는 인적 연대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국민의당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할지,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포함해 이번 대선을 겨냥한 원-포인트 제3지대 집결로 귀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한편, 제3지대의 또 다른 축으로 여겨졌던 바른정당의 대선 참용인 유승민 의원도 제3지대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연대보다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대선 막판 최종 답판에 나서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보수 행보 본격화

정의화 전 의장·손명순 여사·황 권한대행 등 연세 만남

귀국 후 ‘국민 대통령’ 행보에 주력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서서히 정치적 행보에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 전 총장은 19일 오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해 귀국 인사를 했다. 귀국 후 첫 번째 전직 대통령과의 만남인 동시에 처음으로 정치인과 공식 만남을 가진 것이다.

이날 만남은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인 데다가 친이(친이명박)계 인사 중 일부가 반 전 총장의 캠프에 참여하고 있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은 “녹색성장 어젠다를 이어받겠다”고 밝혔으며 이 전 대통령은 대권행보 지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경험을 살려달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반 전 총장은 또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찾아가는 데 이어 20일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나아가 반 전 총장은 다음주인 24일 또는 25일께 법여권 내의 대표적 ‘제3지대론자’이자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국

회의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행보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반 전 총장이 이 같은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정치적 중량감을 보여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손 여사 예방 일정은 PK(부산·경남) 민심 잡기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만큼, 과거 PK의 맹주였던 YS의 적자가 될 가능성을 키우는 자리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황 권한대행과의 면담은 보수 진영 내에서 경쟁자 간 만남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최규하 전 대통령 묘소와 제2연평해전 전사자·천안함 46용사 묘소에 참배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 통합된 과학 분야를 따로 떼고 그 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온 이재명 “野 공동연립정권 만들자”

언론포럼 초청토론회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대선 결선투표를 통한 야권의 공동연립정권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혼자 이기기는 위험하고 못 이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야권이 연대해서 연합정권, 연립정권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선투표제를 본선에 도입하면 자연스레 단일화하는 방법이 생겨나

는 것이다”며 “민주당에서도 검토하고 심사숙고해 모두가 야권 연립정권 수립, 야권연대, 결선투표에 대해 논의를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역할을 했고 오만한 민주당에 경종을, 국민의당을 통해서 새누리당 심판을 했다”며 “호남만이 가진 높은 집단 지성을 발휘했으며 민주당 내부경선과 대선에서도 호남이 앞으로 결정적 역할을 할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7 대선 브리핑

심상정 대선 출마 선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9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의 소수 대기업과 부자의 번영을 위해 99%가 불모로 잡힌 경제는 정의를 잃었다”며 “먼저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금지하고 재벌독식경제를 개혁하고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

입, 재벌의 불공정거래 및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겠다”고 밝혔다.

또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를 목격했듯,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복지에만 쓰는 사회복지제 도입 등 책임 있는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분야에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년안에 승부 납니다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